

투데이 칼럼

일본정부 규탄에 앞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 간 약속을 위배한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를 우방으로 대우할 수 없다”는 아베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한국 정부 책임론’을 주장하는 친일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다. 한 마디로 개탄스럽다.

일단 1965년 협정 체결 당시에는 ‘배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배제했다. ‘배상’은 한 당사자의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다른 당사자가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도 사과와 배상을 끝까지 요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 정부에 지급한 돈과 현물은 미지급 임금, 국공채 및 예금 상환금과 ‘독립 축하금’이었다.

작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전범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못 받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



박 보 경

칼럼니스트 겸 여행작가

아니라 강제노동, 학대, 모욕 등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한일청구권협정에는 개별 기업들의 ‘반인륜 행위’에 대한 배상 관련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 판결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한국 대법원의 판단이다.

사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처음 일본에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이 한일청구권협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각했기 때문에, 일본 변호사들의 도움을 얻어 한국 법원에 다시 제소했

다. 피해자들이 1, 2심에서 승소한 건 박근혜 정권 때였는데, 2018년에야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 알다시피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늦어진 건, 박근혜 정권이 아베 정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재판 거래를 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 법원이 일본 법원과 달리 판단했던 이유는, ‘반인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침해받을 수 없는 보편 인권’에 대한 ‘현대 인류의 상식’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베 정권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을 빌미로 한국에 대한 ‘경제공격’을 감행한 일본정부에 대한 규탄에 앞서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한국 국적의 친일적 수구보수 세력에게 몇 마디 해야겠다. 첫째, 저들은 식민지배 자체는 물론,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 기업, 개인들이 자행한 반인륜 행위’의 불법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저들은 ‘인권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현대 인류의 보편 상식을 거부하고 있다.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군국주의 의식에서 헤어날 수 못하고 있다. 셋째, 저들은 일본 법원에서 패소한 피해자들이 한국 법원에서 승소한 것을 ‘반일감정’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저들에게는 나치 전범 아이히만에 예우살림에서 재판받은 이유를 이해할 만한 양심이 없다. 넷째, 저들은 한국을 행정부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후진 독재국가’로 취급하고 있다. 어떤 대한민국 국민으로 참담하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독자재언

썩썩 달리는 ‘전통킵보드’ 제대로 알아

친환경·초소형 개인 이동 수단인 전기자전거, 전통킵보드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휴대의 편의성이나 교통체증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관련 법과 제도는 아직 미비한 수준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전통킵보드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해 통상 자동차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현재 관련 규정은 차도로만 운영할 수 있고 17세 이상 운전면허증이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소지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면허 없이 타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 술을 마시고 운행한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도로에서만 이용 가능 하고 인도, 자전거전용도로, 공원에서는 탈 수 없으며, 속도도 25km이하로 제한된다. 또, 원동기로 분류되기 때문에 안전모 등의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이다.

여름철 야외 활동이 많고 킵보드의 운행이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게다가 운전자들은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고 속도도 비교적 빠르기 때문에 보행자와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전통 킵보드를 단순 취미 활동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 안전 운행을 해야 할 것이다.

시현진 징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스 지구 필리핀’ 영예는 누가?



10일(현지시간) 필리핀 파라나케에서 2019 미스 지구(earth) 필리핀 선발대회가 열려 ‘미스 지구 필리핀’ 자넬 라조 티(오른쪽)가 왕관을 쓰고 있다. 40명의 미인이 경연한 이번 수상자들은 세계 3대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 어스 2019에 필리핀 대표로 참가한다. 지난해 우승은 베트남의 푸엥 느옌이 차지한 바 있다.

사설

춘화추실 비전은 예산 7조8641억 확보로

전북도는 예산 7조8641억원 확보로 춘화추실의 비전을 구체화해야 했다. 도지사는 얼마 전에 민선 7기 1주년을 맞는 기자 간담회의 자리에서 도정의 성공을 약속했는데 ‘춘화추실’이라는 뜻있는 표현을 선보였다. 그러므로 도지사와 고위 관계자들은 이번엔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도지사가 말한 각각의 내용들은 도지사의 말 그대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룰 수 있을 터이다. 그리고 지금의 열기가 앞으로 계속 뜨거워야함은 물론이다. 이같은 주문은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하는데 전북도가 말했던 10대 핵심 프로젝트가 다시 생각나는 지금이다. 전북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8대 역점 시책도 밝혔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데 전북도는 좀 더 뛰어아겠다는 정신 태도를 가져야 한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한 현안들이 추진에 있어서는 터덕거리고 있는데 자꾸 그러면 실망스럽다. 전북도는 정말이지 힘차게 강력하게 실력 발휘를 해야겠다. 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대상은 새로운 것들이 아

니다. 전북도가 도민에게 여러 차례 언급하고 또 그 성취를 약속한 것들이다.

본보가 춘화추실의 비전을 예산 7조8641억원 확보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 전북도가 기재부에 신청한 예산이 그와 같은 액수였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그러므로 힘내야 한다. 기재부가 7조 원을 한참 밀도는 액수를 말해 전북도가 타협하듯 7조원 내 예산 확보를 말하고 있는데 전혀 마땅치 않다. 벌써부터 저지세의 검색이 보이는데 안 될 일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과 비슷해서는 곤란하다. 7조8641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그 다음해에 8조원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까닭이다.

전북도는 힘내야 한다. 이대로라면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이 언제 성취의 모습을 보여줄지 전망하기가 어렵다. 예전에도 여러 번 지적했거니와 청사건대리라면 진작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들이 아직도 현안으로 남아 답답한 안기고 있다. 도지사가 춘화추실 대도약을 선언한 만큼 확연히 달라진 행보를 보여야 한다. 발전 프로젝트들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전북도는 선도해야 한다.

농업 경쟁력, 정부의 국토종합 계획에 편승을

전북도는 농업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농정의 효과를 여러 번 발표했지만 그래도 민심을 말 할 단계는 아니다. 농가 소득이 올랐는지만 농민들의 경기 체감은 예전 그대로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북도의 농정이 더 욕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어쩌다 농촌 환경이 좋아졌다고 보도할 때도 있었지만 모든 농촌에 해당되는 풍경은 아니다. 도내 농촌 인구가 늘지 않고 있음이 그것을 단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농촌 인구가 현상 유지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여전히 희망 사항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농업의 전망이 밝다고 외쳐봤자 경쟁력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지금과 같지 않고 훨씬 더 강화 된다면 미래가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농촌 인구가 유출되는 중에도 귀농하는 젊은이들이 더러 있는 것을 보면 분명히 희망의 불씨가 있다. 전북도는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계속 연구해야 한다. 전북도가 대도약을 향한 농생명 R&D 전략 세미나를 저번에 개최한 데 이어서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 전북의 농생명 산업을 반영

케 하겠다고 이번엔 밝혔다.

정부의 국토 종합 계획은 그 발상부터가 웅대하다. 내년부터 2040년까지 내다보는 장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다. 장기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대가 그려질 터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농정에 힘을 기울였으므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 마음을 써야겠다. 전북 지역은 전통적으로 오랜 농도였으므로 그 이듬값을 해야 한다. 한국 농업의 선두 주자의 자리를 확실히 해두는 담부이다. 여기 조금 비켜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니와 지난날 청와대에 남뿔했던 군산의 철새도래지 쌀을 비롯해서 정음의 단품미인쌀 등 우리 고장 쌀의 품질이 우수함이 지난 십 수 년 간 입증됐던 걸 생각해야 한다.

전북도는 농생명 산업 발전 전략의 연장선에서 농업 경쟁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다른 산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라고 해도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농업 경쟁력 강화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그래도 전북도는 농생명 산업을 진작시키고 계속해서 도내 농산물의 우수성을 꾸준히 홍보해 성과를 내야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